

# ‘폭동·북한군 개입’ 5·18 처벌법에도 가짜뉴스 판친다

 **80년 5월 그날의 진실 되짚는다** ■ 역사 왜곡·편향 실태

신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지켜낸 5·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5주년을 맞았다. 특히 올해는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며 형성된 ‘오월 정신’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며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에 맞서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숭고한 가치와 연대의 힘은 오늘날까지 소중한 자산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5·18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더군다나 5·18 역사왜곡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역사 왜곡·편향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세력의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80년 5월 광주 진실을 부정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반복되는 역사 왜곡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그날의 진실을 알리는 시리즈를 5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재단, 허위게시물 1897건 삭제  
일부 언론·극우단체 허위 유포  
‘정당 현수막’ 처벌 미지수  
“진실 수호, 시민들 관심 중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인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편향하는 행위가 매년 반복되면서 그날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은폐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5·18 역사 왜곡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SNS 등을 중심으로 북한군 개입설, 무장폭동, 가짜유공자 등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단체들이 국민 분열을 통해 정치적 세력화를 노리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5·18역사왜곡 내용이 담긴 게시물 1,897건을 삭제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시인사이드 1,337건 △일간베스트526건 △유튜브 34건 등이다.

또한 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년간(2022년 5월~2024년 5월) 유튜브 영상의 댓글 등을 모니터링·분석한 결

과,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한 부적절한 발언이 1만 1,111건에 달했다.

탐색된 댓글은 △무장폭동 △북한군 개입 △가짜유공자 △지역혐오 △이념(좌파) 비난 등 5개 프레임으로 분류했는데, 최종 2,687건(24.1%)이 부적절 발언으로 드러났다. 북한군 개입이 808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짜유공자 622건(23.1%), 무장폭동 440건(16.3%), 지역혐오 434건(16.1%), 이념 비난 383건(14.2%) 등 순이었다. 사례로는 “5·18은 김일성 특수군이 할 수 있는 것”, “광주사태 가짜 유공자 밝혀라”, “김대중을 위한 광주 사태 폭동” 등이 있었다.

지난 2021년 1월 제정된 5·18 외곽 처벌법은 5·18 관련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편향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18 외곽 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민간 단체와 민간인이 주도한 5·18 외곽 언론 광고 게재, 검증 없는 보도 등이 성행하고 있다.

지난 2월 극우 성향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는 5·18 역사 왜곡 내용이 담긴 일부 언론 매체의 신문이 광주 금남로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됐으며, 허위 사실을 기록한 해당 매체에 광주·전남 기관들이 광고비를 줬다가 논란을 빚기



아! 또 다시 오월이다. 5월 영령이 잠들어 있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 철쭉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이하고 있다.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이라는 슬로건 아래, 광주 금남로와 국립5·18민주묘지 일원에서 한 달간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하는 시민들의 축제가 펼쳐진다. 이번에 들어설 새 정부에서는 5·18이 헌법전문에 꼭 수록되길 기원해 본다. 김태규 기자

도 했다.

해당 매체는 극우 논객으로 알려진 지만원씨를 비롯한 극우인사를 오랜 시간 주장해온 역사 왜곡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했고,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에서도 5·18 역사를 왜곡하거나 편향하는 주장이 담긴 도서 수백여권이 비치돼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극우 정당이 탄핵 정국 혼란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5·18 외곽·편향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광주 도심 곳곳에 게시하며 오월 정신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

이처럼 5·18 역사 왜곡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자 재단과 광주시 등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5월 1일에는 5·18 역사 왜곡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신문사와 대표,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원순식 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외곽과 편향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야기하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행위다”며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는 이유로

5·18 외곽 현수막 철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이사장은 “일부 극우 정당이 설치한 외곽 현수막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고 있지만, 판결이 지연되는 동안 광주

곳곳에 현수막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5·18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왜곡 시도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

## 전남대병원 뉴스마트병원 신축 에타 통과

2034년까지 9629억원 투입  
ICT 기반 미래병원 모델 제시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사업인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이 국립대병원 최초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30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사업 안전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다. 이는 2022년 12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전남대병원은 총사업비 9,629억원 중 25%인 2,40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오는 2034년까지 전남대병원 현 부지와 전남대 의과대학 학동캠퍼스·간호대학 부지에 1·2단계로 나눠 건립된다.

전남대병원은 새병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 직원 의견수렴을 거친 후 기본설계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1단계(동관 건물)로 오는 2030년까지 전남의대 학동캠퍼스와 전남대 간호대학 부지에 900병상 규모로 신축건물을 완공한 후 주요 진료기능과 수술실, 권역응급센터 등 병원 대부분의 기능을 이전할 계획이다.

2단계(서관 건물)는 오는 2034년까지 기존의 1동·2동·3동·5동 및 제1주차장을 철거 후 해당 부지에 170 병상 및 교육·연구시설, 첨단의료사업화지원센터 등의 기능을 담은 건물을 신축해 개원하게 된다.

전남대병원은 ICT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으로 미래병원의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중환자실 통합상황실을 구축해 원내와 협진 의료기관 중환자의 생체징후 및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원격중환자실 시스템’이나 직원과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실시간 위치정보 시스템’ 등

스마트병원으로서 다양한 의료 IT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부족한 필수요료를 확충하기 위해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대폭 확충한다. 심혈관·뇌졸중·호흡기·응급외상·장기이식 등 5대 분야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전남대병원은 현행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국고지원 기준에 따라 총사업비의 25%의 지원을 받게 됐지만, 나머지 75%인 7,221억원은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정부에서도 지역의료·필수의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국고지원을 최대한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민들의 성원이 절실하다”며 “새병원은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조기완공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준 기자

2~6일자 연휴 신문 쉽니다

#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